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7. 12.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7월 12일(수) 14:00~17:5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38호 ~ 제144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27호 『이지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자료를 작성하는 부서와 제출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출 안 한 경우도 지연제출과 동일한 사유인지?
- (보고자) 회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작성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제출’이라는 것을 클릭하지 않은 것임.

- (위원) 위반행위의 동기를 '중'이 아닌 '하'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14시 1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위원님들 제127호 안건은 비록 자료 미제출기간이 장기간이기는 하지만 담당자가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전송하는 후속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1억 800만 원이 아닌 5,40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8호 『KB자산운용(주) 등 3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사실관계를 보면 지연통지가 된 사안들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

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50% 이내 감경 규정을 적용 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피조치자에 대해서 회사 내 자체 징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몇몇 분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한 것도 맞는지?

- (보고자) 자진신고 했음.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걸쳐서 한 것이 제일 적게 걸린 것이고, 보통 1년 또는 6개월 걸렸음.

○ (위원장) 일단 동 제재사안에 있어서는 한 달을 초과하는 만큼 원안대로 제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여부임.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하고, 이후에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그 감경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세 번째는 제재 이전에 자체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전례에 따라서 20%를 감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함.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제128호 안건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징계를 통해서 20% 감경을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29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 위반행위는 사모상품은 49명까지만 가입시킨다는 생각 아래 49명까지 권유와 모집이 이루어졌으나 1명의 고객이 신규를 취소하였고 이후에 추가로 다른 고객 1명을 가입시켰던 것임. 결과적으로 최종 가입고객은 49명이었지만 권유자 기준으로는 총 50명이 되었고 가입과정에서 신규 취소 고객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실수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 취소고객까지도 권유자 수에 포함되도록 전산을 수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 다음은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한 내용임. 2023년 1월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위반의 경우 펀드와 동일하게 다루어져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3%가 아닌 최소 0.1%에서 최대 0.5%가 되어야 함. 일례로 지난 2월달에 보면

저희 은행과 유사사례가 있었음. 집합투자증권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징금율을 매출액의 0.5%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건 위반관련 매출액이 161억 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도 당초 부과예정인 2억 2,780만 원이 아닌 최소 약 1,600만 원에서 최대 약 8,000만 원 범위 이내여야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부합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동일행위의 반복적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SC제일은행의 증권신고서 위반행위가 검사에서 지적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동일행위에 대한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 당행의 사모펀드 상품에서 증권신고서 위반에 대한 지적은 2020년 9월에 있었음. 그러나 금번 사모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위반행위는 지적 이전인 2018년도 8월에 발생한 것임. 행위의 지적 발생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사모펀드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고 2018년도에 사모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은 2020년도였고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지적은 2022년도인 것임. 만약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2020년 당시에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당시에 지적되었을 사안임. 하지만 사모펀드와 금융감독원 감사 시기가 달라져 뒤늦게 발견된 것이므로 지적된 이후에도 반복위반을 저지른 것은 아님. 결론적으로 본 건은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나중에 발견된 것일 뿐, 지적된 이후에도 동일행위가 반복된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림. 마지막으로 금번 위반은 신규 취소된 고객을 실수로 미쳐 감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 고의는 아님. 또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저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

- (위원) 실제 청약의 권유를 받은 분들이 100% 다 가입하는지? 통상 가입하는 것이 49인이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을텐데 권유를 받은 사람이 전부다 가입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입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험칙상 어떠한지? 입증이 안 된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이고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입증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 안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49인이 가입했기 때문에 청약의 권유도 당연히 49인에게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저희가 50명을 권유한 것은 인정하고 있음.

- (위원) 50명만 했는지? 50명 권유해서 50인이 다 들어왔고 그중 1명만 취소를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fact)인지?

▶ (진술인) 그것은 아닐 수 있음.

- (위원) 이것만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인지,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을 듯 함.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 (진술인) 발생은 되지 않음. 전산개발을 49명으로 딱 맞추다 보니까 신규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발생했고, 이제는 전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그 전산시스템을 언제 보완하셨는지?

▶ (진술인) 2018년 이전에 49명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정도에 전산을 개발했음.

○ (위원) 2015년에 개발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18년인데 어떠한지?

▶ (진술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음. 그때는 전산적으로 49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한 고객이 49명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한 전산개선은 고객이 신규를 취소했든, 실제 가입을 했든 그와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계좌번호가 채번되어 있다면 그 취소한 고객까지도 49명에 포함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49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산을 개발 진행 중에 있음.

○ (위원)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건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129호 안건은 실제 투자자가 49인이며 청약권유자 수 1인만이 초과된 점,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 및 결과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되 증선위가 정상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은 1억 1,39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30호 『(주)제넨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조치가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임. 지금 문제되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공시가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이루어진 것이 10회차 CB 200억 원에 대해서 2018년 4월13일에 공시가 나갔음. 그

때 △△△ 진술인은 당시에 (주)제넨바이오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이사도 아니었음. 그 상태에서 이미 담보제공사실 누락이라는 공시위반행위는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어서 종료가 됐다고 생각함. 그 후에 이루어진 2018년 6월20일에 기존 200억 원 전환사채를 150억 원, 50억 원으로 나눠서 10회, 11회로 분할하고 회사명을 바꿨고 납입일을 변경한 그 정정공시가 △△ 대표 재직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했음. 이것이 범위반행위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고의와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립한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담보제공 사실이라는 중요사항이 누락됐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에 누락됐으니까 이것에 편승해서 이번에도 공시를 정정하지 말고 나는 납입기일과 사명변경 이외에 이것을 정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범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음. 두 번째로 타 사례와의 형평, 그리고 이 공시행위가 누락된 특수성을 말씀드리겠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4조는 조치기준과 다르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제2호에서 유사사건 조치와의 형평성, 제3호에서 당해 조치가 증권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들고 있음. 그래서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저희가 기존 제출한 자료, 2021년 8월18일자 제15차 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음. 본 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고 거기에 오히려 플러스알파가 있음. 인수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까지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공시 서식이 미비하고 담보부사채 신탁법과의 관계상 시장참여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쉬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15차 위원회에서 다뤄진 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진 제재는 과징금 부과 조치뿐이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시 시장에서의 관행이나 개정서식의 미비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증선위가, 저희가 본 의사록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보류 결정을 내리셨음. 그 이후에 그 결정이 다시 번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건에서 과징금 부과조치 이상의 수사기관 통보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당해 조치가 증권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이 과연 중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제넨바이오라는 회사는 2018년 6월20일 직후에 이미 정기공시에서 본 건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했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지 의문임. 그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공시직전 연도에는 관리종목, 환기종목이었고 2018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환기종목이었음. 그리고 이 CB를 인수해간 주체도 정체불명의 CB 이런 것이 아니라 ★★★★★★이였음. 그리고 CB로 조달된 자금이 무자본 M&A에 쓰였다든가 기타 위법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그대로 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된 바가 없음. 그렇다고 하면 2018년에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이 조치로 인해 증권시장참여자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회사와 지금 진술인에 대해서 과연 형평에 맞는 조치인지 좀 의문이 있음.

▶ (진술인) △△△임. 제가 2018년 5월4일에 취임했을 때 사무직 직원이 5명 있었음. 상장회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전년도에 관리종목, 환기종목이고 5월4일에 임시주총을 통하면서 기존에 있던 관리직 직원들, 그러니까 재무담당자나 공시담당자가 동시에 같은 날에 다 퇴사했음.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관리직 직원은 여직원 3명을 포함해서 남자 부장 1명과 총 5명이 있었음. 그래서 회사가 회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이 공시가 일어났던 6월20일은 제가 대표를 맡은지 한 달 남짓 되어서 업무과악 하기에다 버거운 상태였고, 그래서 기존 공시를 급하게 공시담당자가 맡아서, 그러니까 코스닥에 정상적인 회사도 많겠지만 이런 관리나 환기로 가면 전문적으로 공시교육을 받거나 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이런 종목은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이때 저희가 갑자기 들어가서 기존 공시를 그대로 따라서 회사명과 납입자의 요청으로 회차를 10회차, 11회차로, 200억 원을 150억 원, 50억 원으로 나눠달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그때 당시 저희 공시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도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이런 공시를 누락한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음. 저희가 했던 행위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님. 그냥 급하게 들어가서 회사는 그 200억 원이 꼭 들어와서 기업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됐었고, 기존의 담보물권이 그때 당시 최초로 담보제공된 것이 아니었음. 이미 2013년도,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5년 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서 공시가 다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 있었던 주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저희는 서식에 없었기 때문에 단순실수이고 무지의 소산으로 누락을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바로 그 뒤에 3분기 정기공시는 서식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담보제공 사실을 다 기입해서 공시한 내용임.

○ (위원) 2018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 (진술인) 정상적으로 공시되어 있음.

○ (위원) 4월13일에 최초 공시를 하면서 그때는 2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이미 이때 담보제공사실이 누락됐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11회차 CB 발행 처음 결정해서 공시된 것은 며칠인지?

▶ (진술인) 그것이 6월20일 정정공시 때임.

○ (위원) 그러니까 11회차 CB 발행 결정은 6월20일에 처음 이루어진 것인지?

▶ (진술인)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4월13일에 10회차가 200억 원에 같은 인수 주체이고 그것이 150억 원, 50억 원으로 나뉘었다는 것이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당연히 10회차 200억 원을 발행했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위원) △△△ 진술인은 〇〇〇〇(주), (주)제넨바이오 유상증자권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되어서 검찰에 진술하거나 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 (진술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았던 내용은 있음. 검찰은 참고인으로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했고 다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금 저희가 공시의무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인접해서 이루어진 정기공시에는 담보제공 사실이 공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감리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인접한 정기공시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할 것이면 아예 다 안 해 버리지, 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했을까, 이것이 좀 와 닿지 않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이라고 했는데 만약 부정거래행위와 관련성이라고 하면 관련성이 있겠다 싶은데, 미공개정보와의 관련성이라고 하기

에는 와 닿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위법행위와 관련성을 너무 폭넓게 본 것이 아닌가, 어떠한지?

- (보고자) 일단, 정기보고서에 공시된 것이 맞기는 함. 그런데 정기보고서 시점으로 보면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주요사항보고서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공시를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공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
- (위원)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의문임. 제가 3분기 보고서의 주석을 보니까 담보제공사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음. 그런데 주요사항보고서 기재누락을 금감원은 고의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의로 담보제공사실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누락한 것이라면 주석공시도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주석공시는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고의로 주요사항보고서에 담보제공사실을 누락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임.
- (보고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차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음. 저희 실무자가 답변 드린 것처럼 7월말 시점과 그 내용이 기재되는 시점이 3분기 보고서니까 11월 중순임. 최소 3개월 반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주의를 안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기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그런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었던 선례들이 있었음.
- (위원) 그전에도 제재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허위기재이고

부실기재인지 아니면 미기재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저도 두 위원님과 의견이 같음. 이것을 고의로 보기에 너무 옹색하고, 만약 어떤 담보제공 없이 자금을 조달한 그런 외관을 형성하고 싶었으면 4월12일 그때 CB발행 나올 때 2018년 4월12일이 더 고의성이 짙을 것 같음. 누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담보제공 내용이 없는 것이 더 고의성이 짙어 보임. 적어도 그때 들어오는 새로운 경영자 쪽에 △△△씨가 있었다고는 해도 책임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6월20일, 7월30일 발행 확정된 공시에서 담보제공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고의'라고 판단되지 않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제130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동 건 당사자의 담보제공사실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의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됨. 그래서 위반의 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주)제넨바이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억 9,55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과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31호 『Deutsche Bank AG 등 11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위원)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 이 회사는 여러
건이기는 하지만 변동이 크게 없다고 해서 1건으로 잡았는데
시스템 오류가 난 그 기간이 두 달인지?

- (보고자) 한 달 조금 넘음.

-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오류가 난 배경은 무엇인지?

- (보고자) 회사의 업그레이드(upgrade) 작업에 실수가 있었음.

- (위원) 그 업그레이드(upgrade) 작업은 누가 한 것인지? 회
사가 한 것인지?

- (보고자) 회사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upgrade)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 오류가 발생한 사
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원에서 공매도 보고공시 이행
실태 점검을 요청하면서 이런 오류사실을 발견했음.

- (위원) 그 오류가 발견된 것이 회사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
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검사과정이 아니고 금감원의 자체점검을 요청하였
고 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결안건 제132호 『SK하이닉스(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원인사실에 대한 의견부터 진술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사안에서 공매도 주문이 문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본 건은 그간 문제되어 온 공매도 건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함. 우선, Kepler는 주문 당사자나 그 주문을 제출하는 수탁사가 아님. Kepler는 주문당사자인 〇〇〇〇〇〇으로부터 매도주문 접수요청을 받아 수탁사인 〇〇〇〇〇〇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주문 또는 주문 제출의 주체가 아니었음. 다음으로 Kepler의 데이터베이스 이전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주문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회원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제출이나 주문자의 순보유잔고 착오 등과는 달리 공매도 규제 취지나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음. 마지막으로 본 건에서는 주문자가 원래 매도하려고 하였던 보유분으로 최종결제

되어 애초에 매도주문을 하고자 하였던 ★★★★★ ★★★★★
 ★★★★★ 계정 주식으로 매도주문을 낸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2021년 9월21일 Kepler의 고객인 □□□□
 □□은 블룸버그 메시지를 통해서 Kepler에 ★★★★★ ★
 ★★★★★에 SK하이닉스(주) 주식 29,771주의 매도주문을
 접수·요청하였음. 다만, 이때 □□□□□□은 주문주체의 ID
 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Kepler에서는 회사 자체
 의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 ★★★★★의 ID
 를 보충하여 □□□□□□에 주문정보 확인을 요청 하였음.
 그런데 그때 □□□□□□ 측 서버오류가 발생해서 Kepler
 는 □□□□□□으로부터 바로 응답을 받지 못했음. 이에
 Kepler는 □□□□□□에 수차례 연락하여 주문확인을 요청
 하였고 다음날인 9월22일에 □□□□□□으로부터 주문을
 유지하겠다는 명시적인 답변을 받았음. 이에 다음날
 Kepler는 한국거래소 회원사인 ▽▽▽▽▽에 □□□□□□
 의 주문을 전달하였음. ▽▽▽▽▽은 일명 Careful
 Discretion. 즉, CD방식에 따라 해당일 중 분산하여 총
 41,919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이중 □□□□□□이 매도
 요청한 29,771주에 대한 주문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주식
 에 대한 주문은 체결되지 않고 취소되었음. 그런데 이와
 같이 Kepler가 보충한 ★★★★★ ★★★★★의 ID에 오
 류가 있었고 그 원인은 약 1개월 전에 있었던 Kepler의
 데이터베이스 이전 작업 과정에서 ★★★★★ ★★★★★
 의 ID가 □□□□□□이 운영하는 다른 펀드인 ▼▼▼▼
 ▼▼▼▼▼의 ID로 잘못 기재되는 문제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수탁자인 ▽▽▽▽▽에서는 ★

★★★★★가 아닌 ▼▼▼▼ ▼▼▼▼▼의 계좌에서 본 건 매도주문을 내게 되었음.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Kepler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의 주체가 어렵다는 생각임. 즉, 공매도 제한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공매도의 행위 주체를 첫째, 무차입공매도를 하거나 위탁한 자. 둘째, 그 매도를 수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화된 제재안 과징금은 법규 위반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함이 그 주요 취지임. 그런데 본 건에서 대상종목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위탁한 자는 Kepler가 아닌 ◻◻◻◻◻◻이며, 주문수탁자는 ▽▽▽▽▽이고 Kepler는 ◻◻◻◻◻◻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인 ▽▽▽▽▽에 주문을 전달한 자에 불과함. 즉, Kepler는 자본시장법이 공매도 제한 위반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매도주문의 당사자 또는 주문을 수탁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Kepler는 주문 전달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공매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여지도 전혀 없음. 이러한 Kepler의 지위에서는 ◻◻◻◻◻이 운용하는 ★★★★★★ ★★★★★★ ★와 ▼▼▼▼ ▼▼▼▼▼의 계좌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고 본 건 매도주문이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첫 번째로 본 건에서 체결된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이 결제의무를 이행한 후 원래 매도하려고 하였던 ★★★★★★ ★★★★★★ ★ 계정의 SK하이닉스(주) 주식으로 ▽▽▽▽▽에 대차분을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주문자가 원래 매도를 의도한 주

식에 의해서 매도분이 최종 결제되었음. 즉, 본 건에서는 애초부터 ★★★★★ ★★★★★★의 계정으로 주문을 낸 것과 같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음. 두 번째로 업계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본 건과 같이 ID를 혼동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ID 정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별도로 공매도 위반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음. 다만, 본 건의 경우 서울-파리 사이에 시차 문제 등으로 계좌 정정의 기회를 실기하였으나 중국적으로는 ★★★★★ ★★★★★★ ★ 계정의 주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음. 공매도 여부는 주문제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적 관점에서 본 건의 경우를 기존의 ID 정정사례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임. 본 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이 원래 의도된 매도분으로 최종 결제되었고 주문수량 역시 의도된 대로 제출되는 등 공정한 가격형성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본 건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보신다고 하여도 과연 조치예정된 거액의 과징금이 대상 회사의 잘못에 비례하는 제재조치인지에 대하여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블룸버그 채팅을 통해서 주문 확인할 때 항상 펀드 ID번호를 확인하는지?

▶ (진술인) 항상 확인하고, 본 건의 경우에도 저희 의뢰인 측에서 자산운용사에게 물어봤지만 당시에 전산상태의 문

제 때문에 답변을 받지 못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에게 갖고 있었던 펀드의 ID를 사용했었는데 그 펀드 ID가 잘못된 펀드 ID였음.

○ (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사항임.

▶ (진술인) 항상 확인했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주문자가 직접 ID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음. 이제 원천적으로 ID가 잘못 기재되는 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문자가 ID를 기재하고 Kepler 입장에서는 그 ID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위반행위 경과를 고려할 때 ‘중과실’ 사안으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과실’ 의견임.

○ (위원) 저도 자조심의 수정심의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과실’로 판단됨. 이 엑셀파일을 시스템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진술하신 것처럼 인적오류라는 생각이 듦. 항상 확인을 하는데 그때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그날 공교롭게 확인이 안 된 것으로, 그냥 프로시저(Procedure) 상으로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

라고 판단이 됨.

- (위원장) 제132호 안건은 자조심 심의 결과대로 과징금을 10억 6,30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주)씨젠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Putnam Advisory Company LLC(이하 Putnam)은 2021년 5월11일 (주)씨젠 주식에 매도주문을 하였고 금감원에서는 그중 194주에 대한 주문이 공매도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Putnam은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번 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 먼저, Putnam에서는 공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본 공매도 사안은 단순과실로 발생하였음. 본 사안은 공매도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씨젠 주식의 매매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착

오를 일으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Putnam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규모, 본 사안의 공매도 규모 및 Putnam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Putnam이 공매도를 의도하지 않았음이 명확함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본 공매도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매우 경미하였음. (주)씨젠의 2021년 5월11일 하루 거래량은 634,274주이며 본 사안 공매도의 경우 194주로 1일 거래량의 약 0.03%에 불과했음. 거래대금 역시 약 15,580,000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공매도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Putnam은 본 사안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었고 발생한 공매도의 결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 Putnam은 공매도 발생 사실 인지 직후에 장내에서의 차입 및 매수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하였음. 넷째, Putnam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며 회사의 평판을 매우 중시함. 본 사안의 과징금이 확정되는 경우 미국증권선물위원회(SEC) 또는 다른 나라 감독당국에 본 사안에 대해 공시해야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Putnam이 그동안 쌓아온 평판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Putnam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바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한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Putnam에서는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마무리하며 시장 및 금융당국에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본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Putnam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실 것을 바람.

- (위원) 진술서에 보면 손실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왜냐하면 금감원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득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진술인) 제가 금감원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금감원에서 계산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공매도를 통해서 예컨대 받았던 이익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그런데 Putnam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났다고 하면 공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결제일에 펑크(puncture)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매입했던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손실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그리고 진술서에서는 ①①①①① ①①①①①①①가 변상(reimburse)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이

있는지?

- ▶ (진술인) Putnam에서 본 건으로 입은 손실이 한 187만 원 정도 되는데 ㉠㉠㉠㉠㉠ ㉠㉠㉠㉠㉠㉠에서는 그 금액도 변상(reimburse)하기로 하였음.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으면 본 사안에서 과징금이 확정되는 경우 ㉠㉠㉠㉠㉠ ㉠㉠㉠㉠㉠㉠에서 그 과징금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무차입 공매도 발생한 이익 계산할 때 어찌되었든 시장에서 사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공매도 매도단가 그리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후에 매수하는 매수단가 그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고 별도 매수에 드는 경비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위원) 거래세나 거래수수료 이런 필수 수반비용은 제외를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비용측면이라기 보다는 발생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위원장) 동 건에 제척기한이 있는지?

- (보고자) 아님.

- (위원장) 그렇다면 적절한 직접비용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이익, 손실규모를 산정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동건의 3개 당사자 조치안에 있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봐서 만약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 (보고자)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이익규모가 워낙 적어서 그 부분 비용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손실로 바뀔 것 같음.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났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이익손실금을 볼 때 간접비용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거래세를 포함하고 정당한 차입비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공정비용을 고민하셔서 그 부분 검토를 하신 다음 반영하여 다음 번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제133호 안건은 보류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30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3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주)스타키피 등 5개사의 사업재편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및 5개사에 대한 제재 면제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안건 자체에는 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관건은 다음에 증권신고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당히 고생하실 부분 같은데, 결국 가치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음. 왜냐하면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것이 보편적인 상품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음. 그리고 저희 증권신고서에 보면 감정이나 평가하는 쪽에 전문가가 자기 서명한 경우에는 신고서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평가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36호 『텔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37호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텔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신청한 내용은 채무증권투자중개업이고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는 채권중개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를 설명바람.

- (보고자) 텔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주)는 일반적인 채무증권투자중개업으로써 1:1 상대매매를 하는 투자중개업이고 트레이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가 신청한 업무는 채권중개전문회사로 단기사채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인가단위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1:1 상대매매이고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자간 상대매매 체결방식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38호 『넥스트레이드(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넥스트레이드(주)의 법적 명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지만 신청 배경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공한다는 대체거래소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굳이 시장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이 시장인데 시장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좀 어색해보이고 그 신청배경 취지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제공과 소비자 편익 제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가를 받아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체거래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18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하도록 허가를 내 주는데 만약에 18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현행 시행령에서는 예비인가 후에 본인가 신청기간과 별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청을 해서 기한연장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음.
- (위원) 지금 넥스트레이드(주)가 야간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음. 그런데 만약 야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와의 협조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함.
- (보고자) 야간개장이라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협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감원의 공시시스템인 DART의 경우에도 18시까지로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자본시장인프라가 18시까지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많은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는 함.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응TF를 만들어서 넥스트레이드(주)와 긍정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음.
- (위원) 원래는 6개월인데 18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 (보고자) 넥스트레이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 그

리고 다른 증권사와 연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됨.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산시스템도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한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위원)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음. 예탁원과 거래소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관계가 아닌 곳이 업무를 좀 맡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외평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음.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었던 것이 시장감시기능을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하게 되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고 그러한 감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넥스트레이드(주)가 시장감시기능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고 해외의 경우에도 시장감시기능을 일부하는 곳은 있지만 대체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시장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음. 장기적으로는 시장감시기능에 대해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외평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음.

- (위원) 지금 법상으로 상장주권과 DR이 거래 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ETF는 안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넥스트레이드(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과 DR만 거래가 가능한데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이 있어서 넥스트레이드(주)는 향후에 그러한 대상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음.
- (위원) 그동안 자본시장이 발전되어 왔습시다라는 또 한편으로 독점체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미흡해서 발전이 더딘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됨. 그래서 이 안건은 단순히 인가안건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중요한 인프라를 경쟁체제로 바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국자들도 거래소의 자본시장 인프라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감독만이 아니라 도와주는 측면도 많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산개발 과정임. 두 번째는 취급상품임.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임. 자본시장법규를 고치거나 세법을 고쳐주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들이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 부분임. 청산·결제와 시장감시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의 공공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향후에 많이 반영하고 또 검토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39호 『한국포스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거래소에 다시 회원등록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 (보고자) 거래소 규정상 상장증권의 위탁매매는 회원관리규정상 회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전문회원도 회원관리규정상 회원으로 포함되도록 거래소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0호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141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2호 『삼성자산운용(주)의 분할 승인조건 및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3호 『브레인자산운용(주)의 분할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분할신청 배경에 따라서 이 회사들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인지?

- (보고자) 사업계획서상에서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기존 펀드운용전략은 그대로 채택하면서 경영참여목적의 기관전용사모펀드와 경영참여목적 외의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서로 업무의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왔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4호 『(주)카카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인가검토시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에 따라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본시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가시 고려한 인가요건은 유지되어야 함. 그래서 지난 2021년 5월27일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계획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계획 이행여부를 신사업 인·허가시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자본시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른 인가요건은 재량요건인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업체의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시 제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0.4%였다는 점, 2021년 계획제출시 2023년말 기준 30%를 제시한 점을 볼 때 해당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이번 집합투자증권 중개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의 진정성이나 카카오뱅크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이번 인가시 고려한 요건의 내용은 2021년 5월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내용상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2024년 이후에도 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본 건 심의 시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은 말씀하셨던 취지처럼 인터넷은행 인가의 기본적인 질적요건이고 유지요건이라고 생각됨. 그래서 2024년 이후에도 최소한 30% 이상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유지요건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중·저신용자 대출의 이행을 위해서 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사업 진출시 저신용자 대출목표 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증선위원님들의 논의내용이 (주)카카오뱅크에게 알려지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ETF 실시간 위탁매매는 불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ETF 실시간 위탁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舊증권투자신탁업법이라든지, 舊증권거래법에 있어서 상장증권의 위탁매매는 증권사의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여 인가가 나간 것을 자본시장법 하에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인가조건 변경을 한 것임. (주)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위원) 오늘 ○위원님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향후 인가요건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 (주)카카오뱅크에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음. 제144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